

4 양질의 교육



2019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도시

세션1. 학습도시와 SDGs 포럼

세션2. 제3회 SDG4-교육 2030 포럼

2019. 11. 5(화)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자작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C/o/n/t/e/n/t/s

「제3회 SDG4-교육 2030 포럼」 「학습도시와 SDGs 포럼」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도시”

I. 행사 일정	1
II. 행사 개요	2
III. 발표자 소개	3
IV. 발표 및 토론 자료	
기조강연	9
◆ 한국사회의 포용성 (문태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세션 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19
◆ 발표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박연희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 발표2: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변종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	
◆ 사례발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사례 - 수원시 (김태희 - 평생교육사·교육학박사)	
세션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교육	61
◆ 발표3: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박성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 발표4 및 토론: 한국에서 포용성과 교육 (임후남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패널 토론)	
◆ 발표5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학습)과 이주(자) 및 이민정책의 관련성: 한국의 경험과 과제 (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한국사회의 포용성 확장을 위한 방향과 제언	75
◆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	
◆ 오유정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 전예니 서대문구 평생교육팀장	
부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	86

I. 행사 일정

시간	식순	내 용
10:00~10:30 (30분)	등록	
개회식 및 기조강연		
10:30~10:50 (20분)	개회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10:50~11:20 (30분)	기조 강연	한국사회의 포용성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세션 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11:20~11:50 (30분)	발표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11:50~12:20 (30분)	발표2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
12:20~12:40 (20분)	사례 발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사례 김태희(수원시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사·교육학박사)
12:40~14:00 (80분)	오찬	
세션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교육		
14:00~14:30 (30분)	발표3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14:30~15:30 (60분)	발표4 및 토론	한국에서 포용성과 교육 발표/좌장: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연구진 -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5:50 (20분)	휴식	
15:50~16:10 (20분)	발표5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학습)과 이주(자) 및 이민정책의 관련성 : 한국의 경험과 과제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 토론		
16:10~17:00 (50분)	종합 토론	한국사회의 포용성 확장을 위한 방향과 제언 좌장: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패널 -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 - 오유정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 전예니 서대문구 평생교육팀장

II. 행사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2015년 유엔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및 논의 활성화가 필요.
※SDG 4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매년 ‘SDG4-교육2030 포럼’을 개최하여 SDG4 목표 전반에 대한 논의 진행.
※1회: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2017. 11.)
2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2018. 11.)
- 또한 2015년 유네스코는 SDGs 달성을 지원을 위해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를 설립하였으며, 학습도시는 SDGs 이행의 중요한 주체로서 특히 SDG4와 SDG11에 대응하고 있음.
※SDG 11 :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 이에 「제3회 SDG4-교육 2030 포럼」과 「학습도시와 SDGs 포럼」을 SDG4 핵심 원칙인 ‘포용’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공동개최하여, SDG4 국내 이행을 위한 우선과제와 정책, 도시 수준에서의 기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협력기관: SDG4-교육 2030 협의체 기관
- 일자: 2019. 11. 5.(화)
- 장소: 서울 로얄호텔(중구 명동)
- 참가자:
 - 교육부/협력기관 대표 및 담당자
 - SDG4-교육 2030 워킹그룹, 국내 GNLC 회원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 학계, 시민사회, 학생 등
- 주제: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도시

III. 발표자 소개

기조강연



문태훈

기조강연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정책, 지속가능도시, 시스템사고와 모델링 등이 주 연구영역이며,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장,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환경연구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환경정의, 우이령사람들, 한국환경한림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션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박연희

발표1

2001년 부터 도시 지속가능발전 현장에서 지방정부,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획국장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을 거치며 민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지방의제21 성(gender)관점화’와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등을 총괄하였다. 2012년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후변화, 생태교통, 생물다양성, 녹색구매,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국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여 글로벌 동향과 연계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정책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 등 국가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 지방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내 주요 정책이 ‘글로벌-국가-지방정부’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회의와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면서 국가 간 정책 논의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정책결정과정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변종임

발표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 진흥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이수평가심의위원,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위원, 경기도 평생교육자문위원 등 교육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문해교육, 학습도시, 학습공동체, 평생학습정책 등이며, 주요저서로 평생교육의 이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해, 각국의 평생교육 정책 등이 있다.

사례발표



김태희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교육사(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평생학습도시 구축 및 정책 수립, 평생학습지원 등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 대상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따른 업무 공로로 2018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는데 평생학습 전문가로서 기여 하였으며,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Mid-Term Review의 성공적 개최를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세션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교육

발표3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연구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교육지표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오랫동안 교육통계, 교육조사 및 분석, 교육지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민관학 공동 작업반 교육분야 반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통계청 통계분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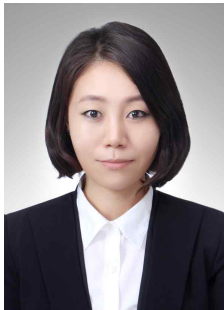


임후남

발표4 및 토론

대학정보공시센터장, 대학평가본부장,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등을 거치고, 현재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 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BK21 지원사업 등 다수의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통계, 교육정보 공개 등 교육 관련 데이터 전문가로 활동하는 한편,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 교수학습 조사 연구, 고등교육 성과 국제 비교 연구,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 등과 같은 고등교육 정책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유네스코 IIEP 주관으로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비교 연구, 개발도상국가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 (몽골 교육통계 발전방안),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등과 같은 국제 비교 연구도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혜자

발표4 및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교육지표연구실 교육지표연구팀장을 맡고 있으며 OECD LSO, 국제기구 지표 분석, 국가수준 교육지표 관리방안, 국가교육통계관리 사업 성과지표 개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교육조사분석연구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류방란

발표4 및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가교육회의 위촉 위원,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교육회의에 파견근무 중이다. 그 외에 신고리공론화 위위원회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교육소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대식

발표4 및 토론

한국통합교육학회 이사, 회장, 한국특수교육학회 이사 등을 거쳐 한국학 습장애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인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Oregon)에서 특수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특수아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설계와 개발, 통합교육,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학생 지원이다.



조혜승

발표4 및 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성인지적 교육 ODA에 관한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세종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국제교육, 교육사회, 세계시민교육과 개발협력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국제교육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젠더와 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육 ODA, 국제 개발협력 등이다.



조영희

발표5

2006년 정치학 및 동남아시아 지역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이주-개발과 ODA-동남 아-교육-거버넌스(정책추진체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다양한 학제 간 주제로 많은 연구와 교육활동을 해왔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단,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위원, 대한 변협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종합토론



조우진

종합토론

199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하여 교육, 과학, 문화,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 현재 교육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최근에는 주로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을 교육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음

종합토론



권호열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카이스트 석사/박사 학위를 포함하여 박사 1개, 석사 2개, 학사 3개 등 총 6 개의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스탠포드경영대학원 IT벤처경영과정과 카네기멜론대 고급소프트웨어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에티오피아 국립AAU/AAiT대 전기컴퓨터공대 학장, 교육부 교육정책포럼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노동부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이사,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부회장 및 강원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정보화와 교육의 결합을 통한 인재육성, 지역혁신 및 산업발전에 관한 일을 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종합토론



오유정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교수학습자료 개발, 대체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2018년 3월 30일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과 신설되면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토론



전예니

2011년 6월부터 서대문구청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서대문구는 2013년 교육부가 지정한 평생학습도시로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했고 2019년 유네스코 학습도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종합토론



윤경효

2002년부터 ‘지방의제21’ 운동에 몸 담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한 9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참가’, ‘이클레이세계총회 참가’, ‘지방의제21 해외연수 및 국제워크숍’ 등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사회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정책 주류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운동 범주를 확대하여, 2017년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족을 이끌었으며, 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SDGs 정책 역량강화와 K-SDGs,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간 등 국내외 정책 대응을 위한 옹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2017년부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MGoS 참여메커니즘에 NGO그룹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유엔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시민사회참여메커니즘(AP-RCM)의 동북아 Focal point로 선출되어, 동북아 및 아태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IV. 발표 및 토론 자료

기조강연

한국사회의 포용성

발표: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의 포용성

문태훈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I. 한국사회의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수준

포용성은 상생발전의 전제, SDGs의 핵심가치 No one left behind

포용성은 다양성의 적극적 수용에서 시작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수준²⁾.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 지수가 낮다.

20년 전인 1995년에도 0.26으로 최하위 수준. 20년간 거의 변화 없이 최하위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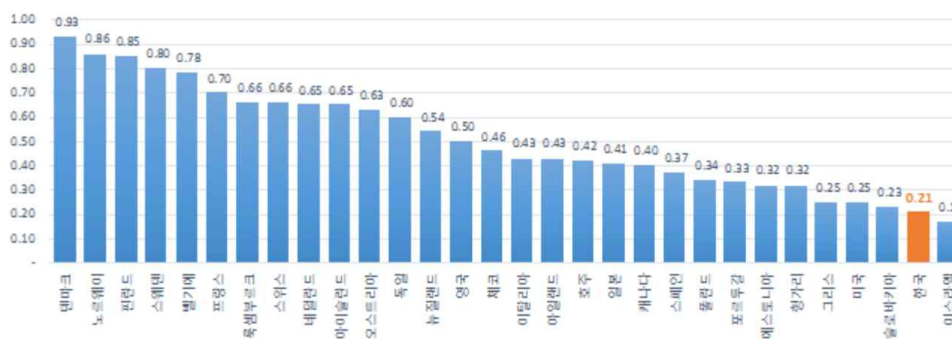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사회갈등으로 치루는 연간 경제적비용 -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국사회갈등의 현주소). 사회적갈등수준이 OECD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실질 GDP가 0.2%정도 추가상승(현대경제연구원, 2016. 사회적갈등의 경제적효과추정과 시사점)

1) 중앙대학교 교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sapphire@cau.ac.kr

2)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영국, 체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헝가리, 그리스, 미국, 슬로바키아, 한국, 이스라엘 순.

구분	한국과 OECD 및 G7 평균과의 사회갈등지수 차이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수준
OECD 평균	18.0%	0.2%p 상승	2.9%
G7 평균	19.3%	0.3%p 상승	3.0%

그림 2 사회적갈등개선시 잠재성장률 개선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사회의 갈등원인으로는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남녀갈등의 순으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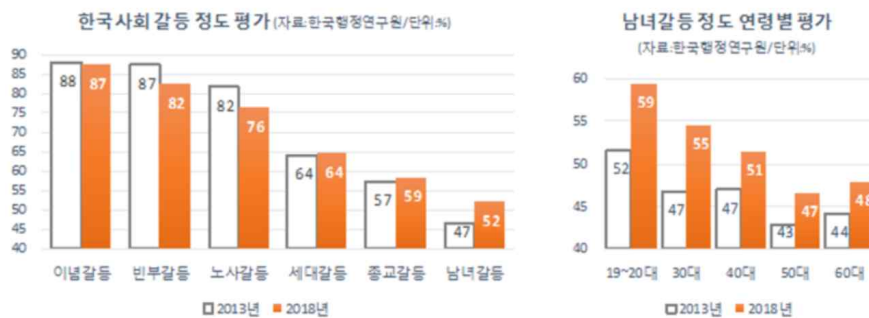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사회갈등 원인
한국행정연구원. 2018.

세대간의 단절도 심각. 한국은 15세 이상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12%. 전체평균은 45%, 조사대상국 30개국 중 30위. 15세 이상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15%, 전체평균은 33%. 조사국 30개국 중에서 29위 (Ipsos 코리아, 2019. 2)³⁾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통합'보다 '분열'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슈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치거나 사회적 갈등을 확산-최저임금인상, 국민연금개편, 탈원전, 대입제도개편, 비정규직, 노동시장 개혁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 갈등조정에 실패. 우버, 에어비앤비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아젠다.

BBC-입소스 글로벌 조사결과에 따르면(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2018. 1-2월 조사)⁴⁾. 한국민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중 12%,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88%. (세계평균 24% vs. 76%)

3) https://blog.naver.com/ipsos_korea/221469804675

4)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8 April.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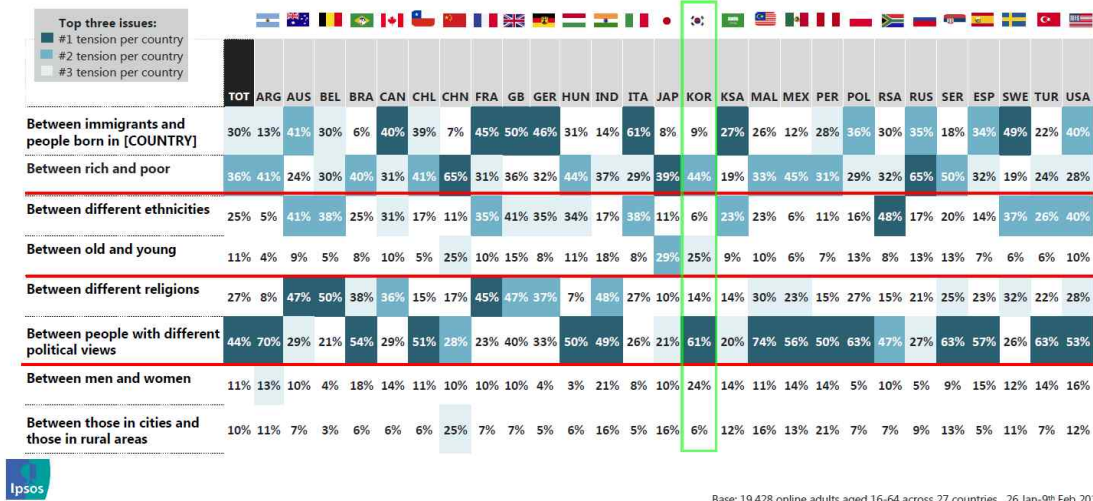


그림4. 갈등과 긴장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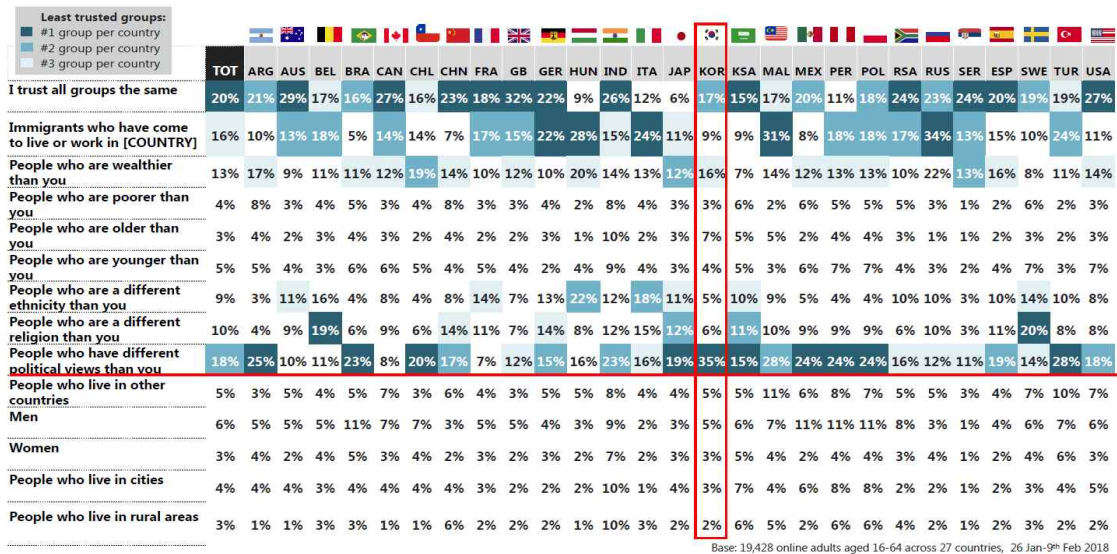


그림5.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

II. 한국사회의 전통과 문화

샤머니즘, 자연만물에 생명과 신이 있다는 생각, 만물존중사상, 돌 식물 동물 - 생명존중사상, 자연에 대한 경외심, ex. 사찰, 상여

한국의 정원 vs. 중국의 정원, 일본의 정원. Ex. 소쇄원. 이화원. 분재.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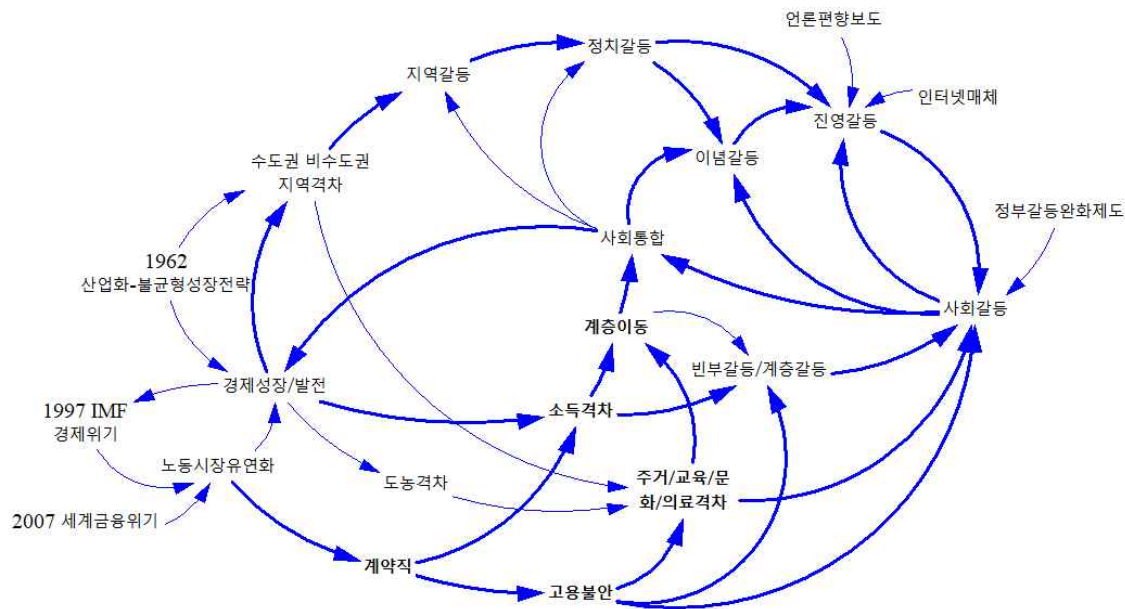
인내천 사상 - 敬天, 敬人, 境地 - 땅과 사람과 하늘을 일체로 보는 관점. 사람 존중. 다양성의 존중. 평등사상

근대화와 합리주의 - 전통의 급속한 붕괴

III. 한국사회의 갈등의 뿌리와 갈등 상승구조

갈등의 상호상승 작용 - 한종류의 갈등이 다른 종류의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정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 - 상호상승작용 피드백 구조(Feedback structure)

그림6. 우리나라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순환적강화 구조



이상의 피드백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와 성장의 한계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이 피드백 작용으로 강화되면서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의 분리현상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사회통합을 해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장의 한계를 가져오는 구조.

우리나라 갈등 구조의 상호순환적 강화과정

1. 196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은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시작. 성장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던 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OIG전략을 사용 - 수출지향적outward oriented 산업화지향적industry oriented, 그리고 성장지향적growth oriented 발전전략.
2. 이 과정에서 수도권, 도시, 영남지방이 성장거점으로 선정. 비수도권, 농촌, 호남권은 성장거점에서 소외
3. 도농격차, 수도권-비수도권격차, 영호남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지역갈등, 정치갈등, 이념갈등으로 전개
4. 이러한 지역격차는 소득,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각부문별 격차를 유발하고 사회갈등과 정치갈등으로 연결되고 사회통합이 약해지는 결과

5. 1997년 IMF위기, 2007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의 양산-고용불안-소득격차-주거교육격차 - 계층간 이동 약화(희망의 약화) - 사회갈등강화-사회통합약화-이념갈등-진영갈등-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
6. 정부의 갈등대응 정책 부재, 언론 편향보도,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정보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기 힘들게 만들고 이러한 공정정보의 부재가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더 심화하는 구조로 악화
7. 이러한 사회갈등의 증가와 사회통합의 저하는 사회발전, 경제발전을 약화하고 갈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어

IV. 포용성의 증진

1. 우리나라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 변화

- 부익부 빈익빈 피드백구조의 특징은 성공과 실패는 초기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
 - 현재의 자원배분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구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원배분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다면, 두집단간의 차이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이나 행정 또는 관행들이 애초에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역사적 연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나 행정 등 한가지 방식에 익숙하게 됨으로써 그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함정을 파악하여야.
 -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성장전략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발전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그러나 발전전략과 정책의 채택과 시행은 충분한 검토, 면밀한 계획, 의견수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 성과를 평가하는 현재의 모든 평가체제가 기존의 시스템을 선호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 성공요인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시각을 파악하고, 현재의 체제가 새로운 대안을 가져올 실험정신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인 정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장려되는 체제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주의와 노력을 경주해야.
 - 우리사회를 둘러보면 모든 평가체제가 기존의 시스템을 선호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기존의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은 위험을 회피하여 안정적인 행정을 가

능케 하지만 패자부활이 힘들어지고 혁신적인 시도와 발상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가 불가능. 혁신적인 정신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이 약해지면서 사회는 기존의 틀을 답습하면서 정체되는 것.

- “사회적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 우리나라 갈등의 근원적인 해소, 그리고 사회적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좋은정치와 좋은행정이 핵심적인 변수
 - 초기조건이 좋았던 집단이 가져오는 성과가 크다 하더라도 이 성과가 그렇지 못한 집단에게 잘 배분되지 않는다면 성과의 사회적 총합의 크기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 더구나 그러한 결정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 결과였을 때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문제의 해결이 좋은정치와 좋은정부로 가능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갈등해결의 열쇠는 정치와 정부에 있음. 그러나 갈등을 해소해야 할 두 주체가 갈등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 정치와 정부의 혁신
-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의 확립, 다른 시각과 생각에 대한 유연한 포용성, 혁신적 정신의 고취와 수용력의 확대,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확립 등이 우리나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
- 이상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갈등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양극화와 “성장의 한계”로 해소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것. 정치와 정부 부분,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 이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틀과 전략이 UN - SDGs, K-SDGs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2. 교육의 역할

- 교육 - 개인역량의 제고 - 모든 SDGs 달성의 기반
- UN SDGs, K-SDGs의 5P 중 People는 가난과 기아로부터의 탈출, 건강과 웰빙, 교육과 성평등을 통한 개인역량의 제고에 초점. - 개인역량의 발전-실질적 자유의 확대 - 자유로서의 발전 = 지속가능발전의 궁극적 목표
- 사회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미래 계층간 이동 가능성을 확대하여 희망의 확산, 사회통합 촉진
 -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외적인 출신계층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하층계층의 상향식 이동가능성이 높아는데 성공
 - 높은 공교육 수준 vs. 보육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진출 vs. 젠더평등
 - 상층계층이 계속 위치를 유지하는 이유 - 사교육, 동류결혼 vs. 부모의 양육행태, 낮은 이혼율, 자녀의 학습외적인 발전에 쏟는 시간과 투자, 50% 이상 (Esping-Andersen, 2015, 양재진, 2016)
- 우리나라에서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복지보다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이동이 가

능하다는 믿음이 큰 역할. 그러나 학력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귀속계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질 높은 공교육에 투자, 맞춤형 지원가능한 노동시장개혁, 육아휴직제도강화, 기업문화개선(양재진, 2016)

참고문헌

- 문태훈. 2012. 시스템사고로 본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3권 제1호.
- 양재진. 2016봄. 사회적이동성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정책논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사회적갈등의 경제적 효과추정과 시사점.
- Esping-Andersen G. 2015. Welfare regimes and social stratification. *J.ofEuropeanSocialPolicy*.Vol.25(I).
-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8. 23 April.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세션 1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발표1: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발표2: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

사례발표: 김태희 수원시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사교육학 박사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1. 서론 :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지속가능발전,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공공가치

개인적 관심의 여부 혹은 업무적 연계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지속가능발전은 이미 유엔 총회에서 합의된 결의를 통해 21세기 우리 사회의 공공가치로 채택한 것이 1992년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UNCED), 일명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동서 간 이념의 벽을 넘어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의제21(Agenda21)’을 결과 문서로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21세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하는 핵심가치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9개 주요그룹(9 Major Group : 여성, 청소년, 노동자, 과학자, 원주민, 지방정부, 기업인, NGO, 농민)을 명시하고, 그 역할과 과제를 동시에 명시하였다. 1992년 유엔회의와 결과문서로 채택 된 ‘의제21’은 21세기 사회적 가치는 지속가능발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교과서로 역할 해 왔다.

유엔은 또한 2002년 리우+10인 지속가능발전지구정상회의(WSSD, 남아프리카공화국)와 2012년 리우+20인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를 거쳐 ‘의제21’ 이행을 점검한 후,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 (Targets)로 구성된 유니버설 목표로서 ‘2030 아젠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채택하고, 2030년 까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이를 점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9개의 주요그룹 외에 풀뿌리조직, 자원봉사자 그룹과 자선재단, 이주민, 노인, 장애인 그룹 등을 포함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그룹의 범위를 확대(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하면서, 합의된 글로벌 목표를 당사국 뿐 아니라 다양한 이행당사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개념, 형평성

아젠다21은 지속가능발전은 ‘자연, 사회, 경제’의 세 개의 기둥으로 이뤄진 개념‘이라고 명시하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실현하는 가운데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극복하고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관점의 사회적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평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슈, 지속가능한 도시

특히, SDGs를 준비하는 논의의 토대가 된 Rio+20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할 할 이슈 (critical issues) 7가지를 선정하고 논의하였다. 에너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물, 해양, 재난, 팬 찰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다.⁵⁾ UN 사무총장은 “2050년 세계 도시 거주 인구는 1950년의 세계 총인구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는 도시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엄청난 도시인구의 팽창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메가시티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 거주자 10명 중 7명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분명하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 노력의 성패는 도시에서 성공 하는가 혹은 실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⁶⁾”라고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는 ‘도시’를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 즉,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 공공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자로서 지방정부 리더의 역량과 역할에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원고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있어서 도시에 관한 논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통해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킹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의 전략계획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적 차원에

5) <https://www.iiasa.ac.at/web/home/resources/publications/options/index3.html>

6) <https://www.un.org/press/en/2012/sgsm14249.doc.htm>

서 도시가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살펴봄으로써 형평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책 논의 동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도시

2012년 리우+20 회의 결과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로 하고, 3년 후인 2015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MGoS)들의 참여와 지원 속에 빈곤종식, 불평등과 부정의 일소, 기후변화에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글로벌 목표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목표는 의제21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유니버설 목표(Universal Goals)’이다. 즉 경제발전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회원국이 책임 있게 이행해야할 목표로서 채택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글로벌 목표의 채택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가 독립 목표으로써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데 있어서도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환경 조성’이라고 명시하면서, 삶터인 도시에서의 포용성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2013년부터 다양한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테스크포스 (GTF ; Global Taskforce)를 출범하여 SDGs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계하기 위한 내용을 제안하고, SDGs를 채택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기울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목표



특히, 목표11은 빈민가의 환경개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명시한 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확대, 포용적 도시화, 빈곤층, 공공녹지 등 공공 공간에 대한 모두의 안전하고 포용적 접근 등을 명시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포용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하여 거의 모든 세부목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1. 7가지 세부목표 (Targets)>

11.1 주거	202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11.2 교통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 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도시계획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유적지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취약성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줄인다.
11.6 환경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소한다.
11.7 공공공간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해비타트 3」와 신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해비타트3는 SDGs가 채택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이 채택된 바로 이듬해인 2016년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인간정주’를 주제로 하는 유엔회의이다. 20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특히 SDGs와 파리협정에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회의 결과문서인 ‘새로운 도시의제 (New Urban Agenda)’는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라는 주제에 대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회의였다.



<그림 - 역대 해비타트 회의 의제와 결과물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자료

실제로 유엔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34항)’ 공식 문서를 통해 ‘키토에서 개최 예정인 해비타트3 회의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해비타트3는 새로운 도시의제(제9항)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은 통합적인 방식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에 기여하며,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SDGs 11번 목표를 비롯한 SDGs와 그 세부목표의 달성에 기여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상호연계성의 명시는 국제사회에서 추진해 온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도시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로벌-로컬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해비타트3의 결과문서인 신도시의제는 ‘도시권 (Right to the City)’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소 파격적이라 평가 받는 부분이다. 도시권이란 도시공간의 생산과 이용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개인적이기 보다는 집단적인 권리로서 우리의 인권 중 가장 무시되어 온 권리” 라고 했고, 도시권을 위한 국제연합 (The Global Platform for the

Right to the City)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 거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Common Goods)로 정의되는 정당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도시를 사용하고 점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규정했다. NUA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를 위한 도시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	
서문 (1-10)	- 해비타트3에서의 NUA 채택 선언 - 미래 도시화 규모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여 인정	A.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사명 공약	
		사회적 (25-42)	경제적 (43-62)
		환경적 (63-80)	
		B. 효과적인 이행	
공유 비전 (11-13)	- 도시권(모두를 위한 도시)을 보장하는 도시 - 모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 제시	서 문 (81-84)	거버넌스 (85-92)
원칙과 사명	- NUA 채택 원칙에 대한 결의 - NUA를 통한 도시 패러다임 전환 약속	도시계획 (93-125)	이행수단 (126-160)
행동 지침 (10-22)	- 모든 국가, 도시가 채택해야 할 보편적 가이드라인 인정 - 각 국가의 상황, 역량, 관습을 고려한 이행 원칙 - 개도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자 정치적 공약	C. 후속조치 및 검토 (160-175)	
		- SDGs 점검 체계와 연계,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71차 UN총회에서 UN-Habitat의 지위와 역할 확인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제안 2026년에 NUA 진행사항 점검 및 2036 해비타트4 개최 약속	

<그림 - 신도시의제 (NUA) 개요 > (23쪽 175항의 문서)

신도시의제의 주요 주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명시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포용적인 도시 (Inclusive City) : 현재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 (2) 회복력 있는 도시 (Resilient City) : 사람·사회·환경에 의한 위험을 견뎌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재난에 따른 영향과 시민들의 취약성을 최소화 하는 도시
- (3) 안전한 도시 (Safe City) : 공공 공간이 다채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낙인이 없어 시민들 사이에 장벽이 없는 도시
- (4)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y) : 변형과 자연 자원에 대한 존경을 모두 고려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
- (5) 참여하는 도시 (Participatory City) : 포용성과 소속감을 일으키고 사회통합과 다양한 다문화 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촉진하는 도시
- (6) 고밀도 도시/압축도시 (Compact City) : 도시 한계 영역 내의 공간을 잘 활용

용하고 대중교통을 촉진하여 토지의 복합적이고 공공적 목적의 사용을 촉진하는 도시, 압축도시는 교외지역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이러한 도시권을 기본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방향은 20년 전 해비타트2에서 국제적 합의를 이뤄 낸 ‘주거권’에서 ‘모든이를 위한 도시’로 진화함으로써 ‘포용성’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도시권이 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와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ICLEI)는 매3년마다 세계 총회를 통해 이클레이 전략계획을 채택하여 회원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최근에 채택한 전략계획은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어떠한 발전 전략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이클레이가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 저탄소도시 (Low Emission Development) :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사람과 자연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저탄소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
- 자원순환도시 (Circular Development) :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모델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전 세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선 순환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
- 자연기반의 도시 (Nature-Based Development) : 우리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회복력까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도시 안팎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욱 풍성하게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실현하는 도시

7)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는 세계 1,75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특화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핵심과제이다. 1990년에 설립된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고,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본에 위치한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22곳에 사무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60여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2012년부터 수원시가 유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회복력 있는 도시 (Resilient Development) : 환경, 사회, 인구 등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필수적인 기본 반응활동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여 이를 흡수·회복·방지·예측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 (Equitable and People-Centered Development) : 보다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도시 공동체의 건설과 빈곤 해결을 위한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

지속가능발전은 ‘사람’을 중심에 둔 개념이다. 자연기반해법을 추구하고 자원순환을 고민하며 저탄소 발전과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은 합리적이기에 앞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3. 글로벌 차원의 도시 지속가능성 위기 진단⁸⁾

도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해결책

지구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구 표면의 2%를 차지하지만 세계 GDP의 70%를 생산하고, 6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7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70%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상위 50개 도시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한다면 그 국가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인류는 결코 최악의 기후변화와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도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가장 유력한 해결책을 찾아 실현해야 할 장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해안에서 60Km 반경 안에 살고 있고, 전 세계 대도시의 1/3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70년까지 50cm 가량의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의 패턴의 변화로 홍수와 범람의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는 현재의 3배가 될 것이며 위험에 노출되는 재산의 규모는 3조달러에서 35조 달러로 10 증가할 것이라 한다. 기후적응에 필요한 비용이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80%는 도시 지역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까지 개도국을 중심으로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에만 2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1,500 명당 한 명 꼴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의 비율을 이 보다 79배 높은 19명 당 한명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로 인해 도시는 심각한 회복력 문제에 노출 될 것이다.

급속한 도시 팽창에 따른 도시민의 취약성 높아져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50년 사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증가분 중 약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의 팽창은 주로 개도국에서 이뤄지며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2/3는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이 20세기 동안 사용한 양 만큼의 시멘트를 소비하였다. UN-HABITAT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슬럼화 된 지역 거주 인구가 전체 도시 인구의 1/4에 이른다. 개도국 인구의 1/3은 비공식 주거지역에 거주하며 이들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도시민의 취약성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Habitat III www.habitat3.org

4. 맺으며 :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1세기 사회발전의 핵심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채택하고, 이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는 사람 중심의 형평성, 포용성을 실현하기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를 진단하는 잣대가 바로 포용성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포용성’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교육과 지역사회 학습 체계는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포용성에 대하여 ‘민감 (sensitive)’ 한가? 그 감수성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삶터인 도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포용성의 가치를 사회적 제도와 기반 시설, 생활문화와 행동양식 등에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을 ‘포용성’의 눈으로 성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과 지역사회 학습체계가 실현되는 도시를 기대한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Equitable and Inclusive Learning Cities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I. 들어가는 글

II.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1. 공평과 포용관점에서 본 한국의 평생교육
2. 평생학습도시, 그 의미와 가치

III. 평생학습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1. SDG4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2. 한국의 유네스코 GNLC 참여 학습도시 현황

IV.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를 기대하며

I. 들어가는 글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성]의 대 전제 하에 본 포럼에서 발표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Equitable and Inclusive Learning Cities)”이다. 공평(equitable)은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포용(inclusive)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공평과 포용은 어느 누구도 배제와 차별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에 참여한 결과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란 누구도 어느 영역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도시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인 신뢰의 기반 위에 개개인의 역량이 집단 차원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도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습에 참여한 결과로 개인과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학습도시는 1992년 Gothenburg에서 개최된 OECD 회의가 도화선이 되어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발맞추어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지방정부, 기업, 민간부문, 지역사회가 손잡고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학습과 혁신에 집중하면서 학습은 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과 도시경제의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Longworth(1997)는 학습도시는 기본적인 번영, 사회안정,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학습이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을 동원하는 도시라고 정의했다. Yanit(2000)는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재생,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다. 학습도시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지며, 학습공동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학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학습도시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학습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2001년부터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발맞추어 평생학습도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역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자치단체가 지역에서의 평생학습 집행구조에 포함되면서 평생학습도시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학습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을 네트워킹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지역혁신에 동력을 제공하였기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2015년 UN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확정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관심과 이해증진 및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UNESCO는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도시 협력플랫폼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를 통하여, 많은 학습도시들이 SDGs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167개이며, 유네스코 GNLC에 가입한 도시는 47개이다. 유네스코 GNLC 가입 도시 중 44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시들이다⁹⁾. GNLC 학습도시에는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부터 최근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선결 요건인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유네스코 GNLC 도시로 선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떻게 해석하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9) 2018년 기준 전 세계 GNLC 가입도시가 52개국 224개인데, 이중 우리나라 가입도시가 44개라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이 조성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자는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들이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거쳐왔고, 평생학습도시들 중에서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 도시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평생학습도시가 가져온 변화

1. 공평과 포용에서 바라본 한국의 평생교육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영역에서의 변화까지 증폭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차원에서는 직업역량, 시민역량 등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개인이 학습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평생학습 참여는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습한 시민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평과 포용 관점에서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8년 뒤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진입을 앞두고 있어¹⁰⁾ 이로 인한 평생학습에서의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한국성인의 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성인의 역량은 20대 초반에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감소한다. PIAAC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성인의 언어, 수리, 문제해결력은 비교국가 23개국 중 중하위이며, 역량 수준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또한 2017 전국성인문해력 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311만명(전체 성인인구의 7.2%), 중학생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인구는 약 517만명(13.1%)이나 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해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비문해자는 계속 상존하게 된다. 더구나 고령사회 진입으로 개개인이 비문해 상태로 지속해야 하는 불편한 삶의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더 많이 배운 사람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학습에 참여하면서 평생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¹¹⁾. 평생교육 프

10)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11) 2018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41.2%이며, 소득, 학력, 연령에 따른 참여율 격차가 크다.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결과,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은 32.2%, 500만원 이상은 46.8%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중졸이하 학력소지자는 27.9%, 대졸이상 학력소지자는 52.3%로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5~34세의 참여율이 52.0%인데 비해 65~79세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7%로 조사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

로그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진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수년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돕기 위해 학습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프로젝트를 확대해왔다. 지역의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다시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평생학습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학습프로그램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고, 학습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¹²⁾. 그 동안 평생학습도시에서는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평생학습을 시정의 주요 테마로 채택하여 시정 제반 영역을 평생학습을 통하여 활성화시켜왔다.

교육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학습에 참여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 줘서 모두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 참여 장애요인 즉,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가장 많이 든다¹³⁾.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주체인 모든 개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학습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습한 결과가 환류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학습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방적인 교육기회 제공에서 벗어나, 지식공유 및 재능기부, 공동체 활성화 등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한 결과와 지역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미 많은 사례들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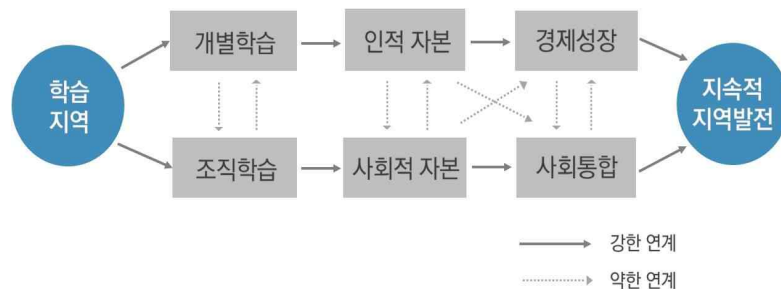
개발원, 2018).

- 12) 학습도시의 평균 학습동아리 증가율은 비학습도시의 평균 학습동아리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손희준 외, 2015).
- 13)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요인으로서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19.1%)’,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8.8%)’ 등의 이유가 주요 평생학습 불참요인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 14) 평생학습도시 서대문구의 세로골목 사업은 엘리베이터를 도시민의 배움을 잇는 골목으로 활성화시킨 사업이다. 서대문구 시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의미없이 마주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골목으로 발상을 전환해 엘리베이터를 세로골목이라고 불렀다. 세로골목을 통해 자신의 학습결과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학습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학습아이템을 제안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사회적 관계회복 의사소통”, “미래형 동력자원 자전거 수리”, “지역의 모습을 그려보는 어반스케치” 등 엘리베이터를 통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구성한 강의를 스스로 홍보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고, 5명 이상 학습자가 모이면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서대문구청이 지원한다. 주민이 학습자에서 교수자로 활동하고, 소통이 부재했던 아파트에서 사람과 사람 간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학습’이라는 중요한 매개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습동아리를 확산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경제활동에 활용하였다.

2. 평생학습도시, 그 의미와 가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제시된 ‘지역 학습문화 진흥을 통한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재구조화 운동(한국교육개발원, 2002)으로 출발했다.

초기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OECD 학습도시 모형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II-1] OECD 학습도시 모형-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자료: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p. 31.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국고대비 대응투자 100% 이상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출발하였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학습도시 추진조직 정비, 평생학습센터 설치, 인력 확보, 협의회 운영, 세미나 및 연수, 도시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선정된 다음해부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 학습-고용-복지 연계, 학습공동체 육성 등 지역 현안해결과 국가시책 등을 연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평생학습도시가 가져온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되고, 지자체내에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조직(과 또는 계(팀) 등)과 추진센터들이 만들어지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들이 충원되었다. 이들 평생교육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이

15)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변종임 외, 2005)를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인한 변화를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 지역사회의 학습지원 네트워크 증가, 지역사회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투자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례 제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1년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변종임 외 2011)”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학습기회 확대, 학습문화 확산, 학습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 제고 등으로 정리하였다.

라는 단어가 독립적인 행정업무로 자리매김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부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단위의 교육’을 거시적, 총괄적 관점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로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역평생학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다.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화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평생학습도시에서 비평생학습도시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종임 외, 2011).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지역평생학습에 관한 국비 지원을 토대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학습문화를 확산시켰다. 평생학습도시 거주자의 경우 비평생학습도시 거주자에 비해 평생학습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변종임 외, 2011). 이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 문화가 구축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시·군·구청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한 뒤에,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제고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성과 공유의 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넷째,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가 높아졌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일어난 또 다른 큰 변화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와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등과 같은 한정적인 관점에서만 주민교육을 접근하던 것과 달리 지역 전체의 발전과 연계하여 주민교육을 이해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지역 평생학습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이해와 관심은 지역평생학습 정책사업들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지속적인 동인이 되었다.

다섯째, 다양한 평생학습기관·단체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지역사회기반 학습공동체를 성장시켰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에 위치한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특히 지역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주체적인 참여와 권한 공유, 학습결과와 학습형 일자리 간 연계 및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자발적 성장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자율성, 정보 공유, 역할 분담과 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이 확대되었다.

Ⅲ. 학습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1. SDG4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MDGs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주로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에 초점을 둔 반면, SDGs는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성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폭력이나 분쟁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7개의 목표(goals)를 구성하였다(이희수, 2018).

교육면에서 가장 중요한 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목표로 한다. SDG4의 세부목표는 7가지로 제시되어 있고¹⁶⁾,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제로 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학습도시 협력플랫폼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를 설립¹⁷⁾하였으며, SDGs 이행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습도시가 특히 SDG4와 SDG11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¹⁸⁾. 유네스코는 2013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북경선언문(Beijing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핵심특징을 제시하였다. 201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2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향한 멕시코시티 선언문(Mexico City Statement on Sustainable Learning Cities)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모델은 다음과 같다.

16) 4.1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6 모든 청소년과 성인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17)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는 상호영감을 제공하고,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수준의 정책 지향적 네트워크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가입 승인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은 우리의 미래”라는 비전아래 평생학습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있다.

18) SD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11: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그림 II-2] UNESCO 학습도시 모델

자료: UIL(2015).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uiding Documents*. p11.

2017년 아일랜드 코크에서 개최된 제3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수준의 평생학습 촉진과 실행을 위한 행동강령(Cork Call to Action for Learning Cities)을 발표했다. 제3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담론을 지역수준의 평생학습 촉진과 실행단계로 이동시키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정부가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학습도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거버넌스의 구성, 다층적인 파트너십 구축, 정치적 관심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는 유네스코 GNLC 회원도시들이 환경 친화적이면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며, 공평과 포용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와 기업이 정신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도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가이드」를 발간했다¹⁹⁾.

본 발표의 직접적인 주제인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전달 메카니즘과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경로를 통해 학습에의 진입과 재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생애단계에 걸친 학습기회 제공을 추구하며, 사회 모든 계층의 학습요구를 고려함으로써 평등과 포용을 촉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고령층의 소외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습을 촉진하고, 세대 통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모든 주민들을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도시이다. 학습도시란 시민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장려함으로써 임파워먼트하는데 관심을 둔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학습도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가이드」(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19) 학습도시 핵심특징에 맞추어서 환경 친화적이며 건강한 학습도시(환경적 지속가능발전), 평등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개인권한부여, 상호문화적 대화, 사회적 통합), 학습도시 내에서의 고용 및 기업이 정신(경제발전 및 문화적 번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녹색 및 건강친화 학습도시,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학습도시에서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이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Learning, 2017)에 따르면, 공평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도시들이 수행해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과 기초 직업기술교육, 다양한 주제의 무료강의, 세대 간 학습, 여성 진로지도,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 등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지역교육 및 문화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 추진, 훈련된 자원봉사자 양성 기제 마련,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 문화 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은 문해와 기초기술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역량, 직업관련 기술 개발, 지역사회 참여 및 적극적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는 사회에서 학습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는 공평과 포용의 달성을 향한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접근성, 포용, 시민참여, 실행사항의 4가지 범주에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7).

먼저, 접근성 차원에서는 공공학습공간과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공공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형식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둘째, 포용 측면에서는 문해, 수해 역량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지, 교사훈련은 제공하고 있는지, 세대 간 교류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성 대상 참여 독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소외계층의 권리를 알려주고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시민참여 측면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는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지,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행사항 측면에서는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참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지, 소외계층을 위한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계획을 도입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들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민들의 문해 역량과 기초기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교육,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소외계층을 위한 친빈곤 재정지원정책을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기반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기반 학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 시민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적절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로로 학습을 촉진한다.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촉진한다.
- 개개인이 공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 안전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 일회성 교육기회 제공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 체제를 담보한다.
- 도시행정 중심 체제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도체제로 권한을 이양한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추진 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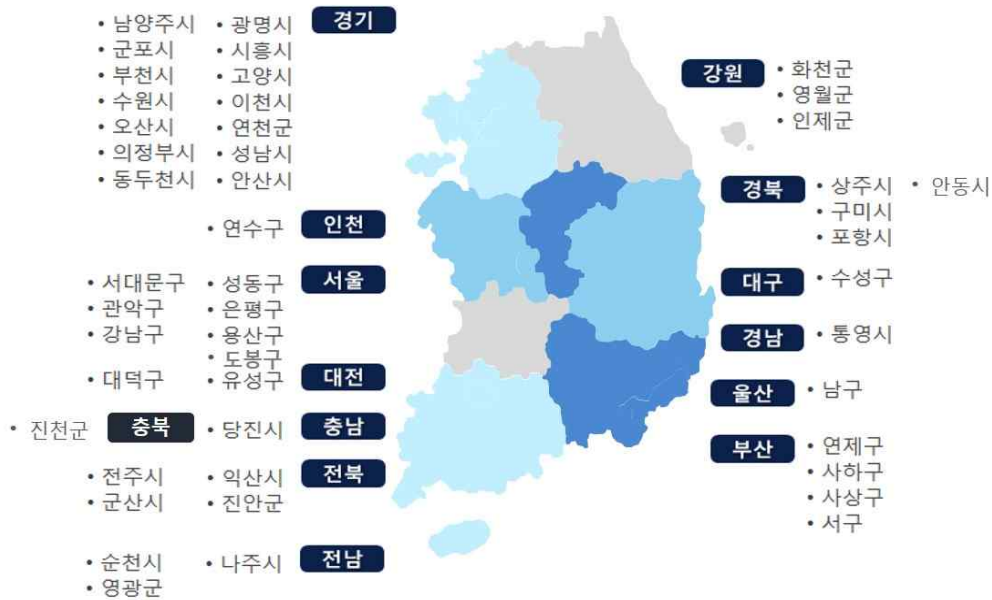
<표 II-1>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추진 과제

영역	추진과제
학습기회제공	■ 시민들의 문해 역량과 기초기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친빈곤 재정지원정책 도입, 다양한 지원 실시
학습공간 / 정보제공	■ 지역사회 기반 학습공간 조성, 지역사회 기반 학습을 위한 자원 제공 ■ 시민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적절한 학습정보 제공, 다양한 경로로 학습 촉진
재능기부, 공동체 참여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촉진 ■ 공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 안전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공동체 건설 지원
지속가능, 주민주도 시스템	■ 일회성 교육기회 제공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 체제 담보 ■ 도시행정 중심 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도체제로 권한 이양

2. 한국의 유네스코 GNLC 참여 현황

유네스코 GNLC 회원가입은 2016년에 유네스코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며 추진되었고,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2019년부터는 매년 국가별 최대 3개 도시까지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가입 신청 시기도 3월부터 4월까지로 제한하였다. 가입도시는 2년마다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회원도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학습도시 가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개 광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와 같은 현상으로 경기도, 서울의 경우 GNLC 가입 도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많은 지역에서 유네스코 GNLC 가입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3]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현황

평생학습도시와 유네스코 GNLC 학습도시 관계를 보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연도로 활동기간을 구분해 보면(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활동한 도시들이 50% 정도이며, 5년 이상 된 도시들까지 하면, 약 80% 정도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간이 오랜된 도시들의 참여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과 인프라가 조성된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II-2>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평생학습도시 활동 기간

평생학습도시 활동 기간	유네스코 학습도시명(평생학습도시 지정연도)
5년 미만 (2015~2019)	오산시(2015), 용산구(2016), 영월군(2016), 영광군(2017), 울산남구(2018), 성동구(2019)
5년이상 ~ 10년 미만 (2010~2014)	수성구(2011), 남양주시(2011), 은평구(2012), 당진시(2012), 포항시(2012), 인제군(2013), 서대문구(2013), 강남구(2013), 사하구(2013), 부산서구(2013), 성남시(2013), 군포시(2013), 의정부시(2013), 도봉구(2013), 고양시(2014), 연천군(2014)
10년 이상 (2001~2009)	광명시(2001), 유성구(2001), 진안군(2001), 부천시(2002), 연수구(2003), 순천시(2003), 안동시(2003), 관악구(2004), 이천시(2004), 전주시(2004), 익산시(2005), 수원시(2005), 시흥시(2006), 연제구(2006), 안산시(2006), 화천군(2006), 진천군(2006), 사상구(2007), 대덕구(2007), 군산시(2007), 구미시(2007), 통영시(2007)

<표 II-3>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 현황

광역시	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네스코 학습도시 가입연도		
				'16	'18	'19
서울	25	18	7	관악구(2004) 은평구(2012) 서대문구(2013) 강남구(2013) 성동구(2019)	용산구(2016)	도봉구(2013)
부산	16	15	4	연제구(2006) 사하구(2013)	사상구(2007) 서구(2013)	
대구	8	4	1	수성구(2011)		
인천	10	6	1		연수구(2003)	
광주	5	5				
대전	5	4	2	유성구(2001) 대덕구(2007)		
울산	5	5	1	남구(2018)		
세종		1				
경기	31	29	14	광명시(2001) 부천시(2002) 이천시(2004) 수원시(2005) 시흥시(2006) 남양주시(2011) 군포시(2013) 의정부시(2013) 고양시(2014) 연천군(2014) 오산시(2015) 동두천시	안산시(2006) 성남시(2013)	
강원	18	11	3	화천군(2006)	인제군(2013) 영월군(2016)	
충북	11	8	1			진천군(2006)
충남	15	13	1	당진시(2012)		
전북	14	10	4	진안군(2001) 전주시(2004) 익산시(2005) 군산시(2007)		
전남	22	13	3	순천시(2003) 영광군(2017) 나주시		
경북	23	10	4	구미시(2007) 상주시	포항시(2012)	안동시(2003)
경남	18	13	1	통영시(2007)		
제주	0	2				
계	226	167	47	35	9	3

* 괄호안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연도

현재 유네스코 GNLC 가입 학습도시는 47개이며, 이 중 세 곳을 제외하면 44곳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시들이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해 놓은 평생학습도시들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수준에서 평생학습적 접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해하고자 유네스코 GNLC 경과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들을 살펴보았다²⁰⁾. 이를 위해 앞서 정리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추진 과제 영역별로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한국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공평하고 포용적인 과제 수행 현황

영역	과제내용
학습기회 제공	문해교육, 인생학교, 시민대학, 시민교육포럼, 시민참여학교, 경력단절 여성 학교, 인생후반기 50플러스, 시민자치대학, 시민인문학, 은퇴자학교, 시민강사 양성, 기초직업 체험학습, 배달강좌, 여성아카데미, 여성자치대학, 찾아가는 어르신강좌, 신중년학교, 장애인학습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강연, 민주 시민교육, 농업생명대학, 부모교육(아버지 교실, 코칭맘스쿨), 환경교육, 군 평생교육, 통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
학습공간/정보제공	지역 유휴 시설의 열린 학습공간화(똑똑학습 번개, 똑똑PLACE, 우리동네 학습공간 발굴), 근거리 학습공간 확보사업(평생학습 플랫폼, 학습마당, 학습카페, 동네배움터, 동네학습관, 평생학습다락방, 동네방네학습관, 길거리학습관), 소외지역생태학습마을 만들기, 학습공간 공유플랫폼, 작은도서관,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자연생태 체험학교, 홈페이지 구축, 학습플랫폼 구축, 학습·교육포털 구축, 등
재능기부, 공동체 참여	학습동아리육성 지원, 우리동네 학습여행(역사문화체험), 지역학 개발 프로젝트, 주민중심 지역학 개발, 학습릴레이 포럼, 소소한 학교, 학습기부뱅크, 마을주민주도 학습공동체, 평생학습 축제, 체험형 교육 축제 교육장터, 시민주체 학습지도 만들기, 서로서로학교, 등
지속가능, 주민주도시스템	평생교육 조례제정,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행복학습센터, 학습등대,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협치교육 평생학습계좌路(학습마일리지), 학습도시 구축 정보제공, 학습마을만들기, 등

먼저, 학습기회 제공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해교육은 47개 학습도시 중 강남구 1곳을 제외하고 46개 모든 곳에서 문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시민들의 문해 역량과 기초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소외계층 대상 교육 등 공평의 측면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노인, 신중년,

20) 학습도시의 전반적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GNLC 경과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를 갖는다.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 생애주기별 대상별·영역별로 인문학, 시민교육, 통일교육, 농업교육, 환경교육, 부모교육 등 포용의 관점에서 누구도 어떠한 내용도 배제되지 않도록 학습기회를 개발하여 제공하려고 함을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정보와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휴시설 학습공간화 프로젝트와 근거리에서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볼 수 있다. 똑똑학습 플레이스, 동네 학습공간 발굴 등 학습공간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와 학습카페, 학습 다락방, 동네 배움터, 동네 학습관 등등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근거리 학습공간을 만들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에서 추진된 읍·면·동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의해 다양한 근거리 학습공간 발굴 경험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다양한 학습동아리 조성사업, 학습기부뱅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습기부뱅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릴레이 포럼을 하고, 지역의 학습지도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학을 개발하여 동네학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학습축제에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학습으로 승화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도록, 또한 행정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례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조례제정, 지역의 평생학습종합계획수립, 평생학습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 등 기반 조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등대, 행복학습센터, 학습마을만들기 등 지역 공간과 자원을 재구조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갖추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수 있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세로축은 추진해야 할 과업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주체), 가로축은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는지(지속가능성)를 준거로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II-4] 한국의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형화

학습참여 유도형은 지자체 주도로 일회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경우로 주민들에게 대상별, 학습내용별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발적 참여학습형은 주민주도로 자발적인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학습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프로그램, 지역학을 개발하여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 등이 자유롭게 지지받는 유형이다. 시민사회 공동체형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등과 같이 학습공동체 주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안에서 지원받는 유형이다. 안정적 시스템형은 시스템구축,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학습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지자체의 시스템 안에서 지원되는 유형이다. 학습도시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경험 이후 자발적으로 기획과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공동체인 학습동아리를 통해 시민사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거나, 지자체의 시스템 안에서 구체화하여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를 기대하며

평생학습은 공공성,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시민의식과 신뢰, 관용, 사회적 협력, 연대, 참여 등을 포함하는 시민역량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개인 학습자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고, 이웃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맞이하고 있다. 시민은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되고 학습을 통해 창조적

인 문제 해결자가 된다.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시민이 바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행동하는 시민이 바로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를 만든다. 더 많은 평생 학습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지역 안에서 실천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를 만들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기초문해교육에서 생활문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해는 개인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 필요 능력이다. 박준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은 “문해능력은 참여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 시작이며, 문해교육이 한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프트파워’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문해는 단순한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이해 차원 이상의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기초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문해교육(functional literacy)이 필수불가결하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포용성장과 전 생애 단계의 문해교육을 위한 누구나 자신의 문해능력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문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 학습모임 활동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기대한다면, 개인의 학습결과를 집단지성화 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습공동체는 시민이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고, 이웃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학습공동체가 하나의 보편적 생활문화로 자리잡아 지역에서, 일터에서 공동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학습하는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될 때,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개발과 협력 학습의 장을 통해 공평하고 포용적인 민주적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시민들은 소규모 학습 모임을 통해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재능기부하며, 사회관계 문제를 해결 하기도 하고, 지역을 회복시키기도 한다. 공동체의 삶이란 구성원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나누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반성장 과정이다.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적 자원으로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재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나라마다 활성화되면서 smart citizenship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공해, 교통체증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기존 도시가 쇠퇴하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와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시민 참여로 도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더 나은 도시와 지역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마련 대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주도의 혁신문화 창출, 도시 데이터 개방·활용 등을 통해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로 상향식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전략 활용이 필요한 때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려면, 단계별, 체계적으로 학습도시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조사 도구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로 창출된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킴으로 각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벤치마킹과 특성화의 자발적인 풍토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태중·조순옥(2010).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탐색-국민보건의 향상, 사회민주화와 인권보장, 사회평등의 진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16(4). pp.243-270.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박준식(2019). 성인문해교육과 사람중심 포용사회의 가치 실현. 포용과 공정사회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정책 포럼. 서울: 국회의원조승래·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변종임·권인탁·김남선·양병찬·양홍권·채재은(2005). 지역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권두승·양병찬·이희수·이경아(2006).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고영상·현영섭·홍영란·채재은(2011).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채재은(2014). 지역평생학습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0(2). 889-119.

- 변종임·이희수·이성·현영섭·고영상·이정의·위영은·이세정·김세화(2014). 창조적 학습공동체 기반 평생교육 혁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손희준·라휘문·임형백(2015). 지역발전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지자체간 연계전략 연구-평생학습도시의 운영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안내서. 학습도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을 위한 가이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희수(2018). 한국교육과 SDG4-교육 2030.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통계청(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8). 2018 고령자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02).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yun, J.I(2018). *Lifelong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 building lifelong learning communities for smart cities*. WISE Words podcast(Oct 29, 2018). WISEd.RIVEW
- Longworth, N. & Davies, W. (1997). *Lifelong learning: New visions, new implications, new roles for people, organization, nations and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London: Kogan Page.
- Longworth, N.(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Kogan Page.
- Longworth, N.(2001). *Creating lifelong learning cities, towns and regions - The local and regional dimension of lifelong learning*. available at <http://tels.euproject.org>.
-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7), *Learning Cities and the SDGs: A Guide to Action*.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 <http://www.ala.asn.au/learningcities/LGALearningLayout.pdf>.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사례

김태희 (수원시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사·교육학박사)

I. 서론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UN의 모든 회원국이 함께 추진해야하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 : SDGs)를 채택하였다. UN SDGs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SDGs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행이 요구되어진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당장의 필요한 자원을 현 세대에서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사용할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또한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모든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SDG4-교육 2030은 국가별 자율적인 이행 책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현세대 사이의 균형과 조화, 현세대 안에서의 사회적 통합,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약속하고 실천한다(임현묵,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언급하기 전에 이 목표가 수립되어진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00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유엔에 모여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기반이 된다. ① 절대빈곤과 기아 종식 ② 초등교육 보편화 ③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향상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⑧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 항목이었다. 이 8개 목표는 국가적인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MDGs가 수립된 배경이 된다. MDGs는 향후 SDGs로 발전되는 초석마련을 하게 되는데, 구상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행을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각인시켜 준다.

II. 학습도시 수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전략

인류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 안에서 단편적인 해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의 도시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다. 약 12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이기도 하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향후 10년 동안 수원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연구과제로 수원시정연구원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SDGs 이행체계구축을 위하여 ‘거버넌스로 실천하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전 지구적이며 포괄적인 UN-SDGs를 지역에서 달성하고자, 2년 여간 시민이 지역의 관심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직접 작성하고 2017년 11월 민·관 공동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민·관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민간영역에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UN-SDGs를 지역의 여건과 시민의 관심사에 맞도록 개편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수원SDGs)」를 작성 하였다. 10개의 목표 57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한 수원 SDGs는 시민이 주도하여 작성한 최초의 지역형 SDGs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수원시는 시민이 만들고 합의까지 이루어낸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민·관 공동 선언을 통하여 수원시의 시정목표로 선언하고, 2030년까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담조직(지속가능전략팀)을 신설하여 조직적, 방법적 체계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전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3대 분야	환경		경제		사회	
	밝고 맑은 도시환경		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목표	목표 번호	목 표			세부 목표	이행·평가 지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7	15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5	10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5	12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4	6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6	16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7	7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7	22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5	14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			5	15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6	16
	총 합				57	133
평가 체계	수원 시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수원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수원시의회	외부전문가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보고서					
추진 체계	실행	수원시, 시민사회, 수원상공회의소				
	평가,모니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수원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조직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과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제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조례 등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민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200명 이내 구성으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지표개발, 시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민간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와 유사한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0명 이내 구성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 수립·변경 및 관리,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안, 시정정책 지속가능성 자문,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작성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 경제, 사회 3개 분야, 10개 목표, 57개 세부목표, 15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사전작업으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28개 지속가능발전 전략 제시, 상시 점검방법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기반 구축,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방향 및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추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성 및 시민, 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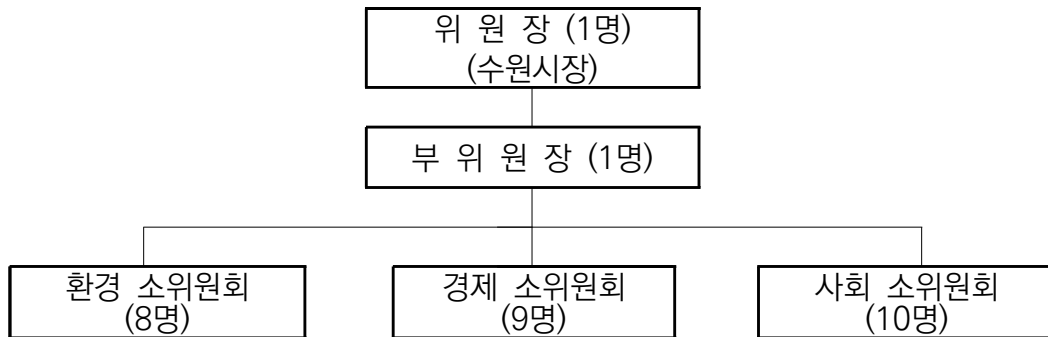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으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의 목표별 이행과제 발굴 및 실행관리를 위하여 57개 세부목표별 100개 이행과제 구성(환경 29개, 경제 27개, 사회 44개)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한 정기,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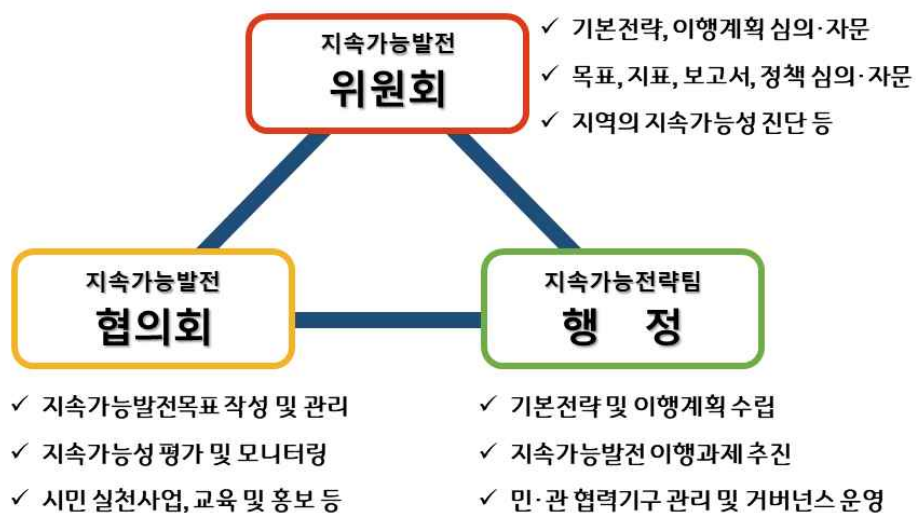
- 시 기 : 2018. 10월
- 구 성 : 29명 위원

구 분	합계	위원장	부위원장	전문가	시의원	행정	비고
		수원시장	위촉직(호선)	위촉직	위촉직	당연직	
위원회 (명)	29	1	1	17	3	7	위촉직 (남12, 여9)

- 위원회 역할
 - 지속가능발전 계획 검토·자문 및 승인
 -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관리
 - 기타 지속가능발전 정책제안 및 관리
- 운영주기 : 정기회의(2회/연), 임시회의 및 소위원회 (필요시)
- 위원회 조직도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수원시 사례의 주요 특징으로는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성격이 다른 거버넌스 기구를 동시에 운영하여 참여의 방법과 권한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협의회의 장점인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위원회의 장점인 행정의 참여유도를 적절히 접목하여 민·관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전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주체인 시민과 공무원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충분히 내재할 수 있기 위하여 기존 목표관리 방법인 지표의 정량적 관리 체계와 다른 과정중심적인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실행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정성적 추진 체계로서 이행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지속가능성의 이해가 쉽도록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평가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참여자의 역량 제고 후 정량적 평가 도입을 통한 개선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기본전략 28개

환 경	경 제	사 회
1. 모두를 위한 착한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저감 • 저에너지 녹색도시체계 개편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 건강한 식생활 안착 • 지속가능 먹거리 보장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 교육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 배리어 프리 도시 조성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 생물종 보전 • 생물서식지 보전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 • 안정된 기업환경 조성 • 창업보육 생태계 지원	8. 성평등과 다문화사회 실현 •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 다문화 가정 삶의 질 증진
3. 맑고 깨끗한 물 순환 도시 • 하천의 건강성 증진 • 물 순환을 증가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녹색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 가치 우선 •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 지속가능한 관광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 • 보편적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 주거비용 완화 • 시민 문화활동 활성화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립 • 민주 시민성 증진 • 안전도시 구축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구 분	추진체계 구축 (2018)	초기운영 및 개선 (2019)	지속운영 (2020~지속)
제도 및 조직정비	조례 제정 (2017)	행정 조직(팀)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조직 검토(확대)	위원회 운영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기본전략 수립 2019 이행계획 수립 추진	이행계획 추진	
추진인프라 구축	위원회, 협의회, 행정 정책 추진체계 구축	위원회, 협의회, 행정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및 매뉴얼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2030목표, 지표개발 (2017)	목표,지표 개선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개선 및 평가결과 정책 환류	
실천역량 강화		시민 지속가능 역량강화교육 정책담당자(공무원) 지속가능 역량교육	
국내외협력	SDG 11번 이행보고	UN SDGs 이행보고 지속가능 정책 국내외 협력	
완 료 계 획			

Ⅲ. 글로벌 학습도시 수원의 SDG4 이행사례

2018년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실시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3. 전담 조직 신설 검토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SDGs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부서 팀장 65명을 대상으로 'UN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방정부 접목 방안 강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실무교육,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다른 이행과정으로는 수원 SDG 11번 이행보고서 작성 및 UN 플랫폼 등록으로 수원시 도시공동체 관련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대상으로 SDG11번(도시공동체)과 연계한 수원시 도시정책 현황 진단 및 사례연구, UN SDGs 플랫폼 등록을 통해 국제사회 공유 및 지속가능성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추진(지속가능발전 정책 살롱)으로 공무원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해, 수원형 SDGs 추진에 따른 공무원(실무부서)의 역할 등 추진을 담은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 교육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미래세대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리더 양성교육 추진으로 시민 전문가 양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초등학생 대상교육,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무자 대상교육, 기타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강연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과정 중심적 이행계획 수립(정성적 사업추진⇒참여자의 지속가능성 이해제고)를 담고 있다. 이행과제 실행 중 지속가능성을 개선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지표⇒이행과제⇒목표달성 순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결과 중심적 정량정책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행과제 추진관리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이행계획(과제)에 대하여 반기별 실적관리 및 지속가능성 자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속가능목표별 이행과제 현황

분 야	목 표	세부목표	평가지표	이행과제
환 경 (2 9 건)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7	16	14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5	11	8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5	15	7
경 제 (2 7 건)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4	12	6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6	17	13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7	7	8
사 회 (4 4 건)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7	23	15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5	14	7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	5	17	10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6	20	12
합 계		57	152	100

수원시는 특히 글로벌 연계와 파트너십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국제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매도시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작성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수원시는 2017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여 세계에서 인정한 학습도시이다. 특히,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야학기관, 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시민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방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해교육 지역거점기관 육성을 위하여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문해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강사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따라서 SDG4.6에 해당하는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목표에 지방정부 차원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문해율 100% 달성을 위하여 인적·물적·공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도 수원시의 강점인 글로벌 차원의 세계시민성 교육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남태평양 국제성인교육협회(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ASPBAE)에서 발간하는 Ed-line 2019년 6월호에는 SDG4.7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의식에 따른 공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에서의 SDG4.7 구현을 주제로 수원시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SDG4.7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따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수원시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평생

학습으로 세계 시민성 자질과 소양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특히 ESD 차원에서의 이행과제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 공교육 실현을 위한 다자녀 지원, 민주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평생학습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이행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향후에도 지역내 인권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해와 시민 기본권에 대한 연속강좌, 민주적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십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위한 교류, 전시, 공연, 네트워크 파티 등의 민주적 시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스페이스X와 고고장이라고 명명한 학습 공간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 특화분야인 인문학을 표방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및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등의 법적 근거로 토대로 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오블리주 5.0+”를 추진하여 성인지 정책영역의 확대 및 고위 공직자의 책무성을 증가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IV. 결론과 제언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시민이 주도하여 작성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시민이 원하는 수원의 모습(정성적 목표)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이 원하는 수원의 모습을 수정이나 보완 없이 행정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정하였고, 집단지성을 통한 시민의 의사결정을 행정에서 실현하는 지방자치 스스로 추진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정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정량적 목표달성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추진 방법을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중심적인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 체계를 과정개선→지표개선→과정개선→반복을 통한 목표달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이 태동하는 시기로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제시했다는 점이다. UN 등 국제사회와 국가단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실천하는 곳은 극소수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여건이 다양하여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모범적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기존의 체계와 다른 수원시의 과정중심적 추진체계는 지

속가능발전 정책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소통과 참여의 시민 주도적 평생학습 추진사례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답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임현묵, 박환보(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수원시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내부자료(수원시 2019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세션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교육

발표3: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발표4: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5: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발표 내용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보고서 참고

한국에서 포용성과 교육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발표 내용

‘SDG4-교육 2030: 포용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보고서 참고

‘포용’ 사회를 위한 교육(학습)과 이주(자) 및 이민정책의 관련성: 한국의 경험과 과제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포용’ 사회를 위한 교육(학습)과 이주(자) 및 이민정책의 관련성: 한국의 경험과 과제

2019. 11.0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포럼 발표 -

조영희(yh.cho@mrtc.re.kr)



OUTLINE

-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 II ‘포용’ 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 IV <2019 GEMR>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시기에 따른 관점과 정책변화

시기	관점	정책방향
2차 대전 후 1973년까지	낙관론	이주자의 본국 귀환을 통해 자본과 지식이 본국에 전달
1973~1990	비관론	두뇌유출, 개발분야에서 이주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유입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1990~2001	수렴론	회의적 관점 유지되면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관심이 낮아짐
2001~현재	낙관론	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두뇌확보 및 개발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디아스포라 논의가 부각됨, 이주의 개발기여가 순환 및 귀환이주와 연결되어 논의됨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Migration in MDGs(2000~2015)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GFMD (2007~2017)

개최시기/개최도시	주제
2007 / 브뤼셀	이민정책과 개발정책 간 정책일관성
2008 / 마닐라	개발을 위한 이주자의 역량강화와 보호
2009 / 아테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개발전략과 통합적 이민정책
2010 / 푸에토발라타	이주와 인간개발을 위한 파트너십-공통의 이익과 책임
2011 / 제네바	이주와 개발의 일관성, 역량과 협력에 대한 실천
2012 / 모리셔스	이주자의 인간개발 강화와 공동체와 국가의 개발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
2014 / 스톡홀름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이주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2015 / 이스탄불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간의 이동
2016 / 다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 변화하는 이주 의제 모색
2017 / 베를린	이주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모색

*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SDGs와 이주(자)의 연관성 맥락

- 1) 이주(자)의 취약성 고려
- 2) 이주(자)의 개발잠재성 고려

SDGs와 이주(자), 이민정책 연계 방식

- 1) 이주(자), 이민정책 직접적 관련 세부 목표 (8.8 / 10.7 / 10.c / 16.2 / 17.18)
- 2) 타 분야 SDGs에 내재된 이주관련 세부 목표 (교육, 도시 등)

SDGs 이주 직접 관련 세부 목표: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정규적이며, 책임 있는 인구이동과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SDGs 이주 직접 관련 세부 목표: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SDGs 이주 직접 관련 세부 목표: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SDGs 이주 직접 관련 세부 목표: 16.2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중식한다)

SDGs 이주 직접 관련 세부 목표: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I. 개발목표와 이주의 연관성

유네스코 <2019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R)>
이주, 강제이주와 교육: 장벽이 아닌 가교 만들기>
- “국제이주와 교육” 주요 쟁점 분석 -

<문제>

1. 이주는 교육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주자의 교육 취약성을 고려한 이주자 수용국의 교육제도 변화
2. 이주자의 교육을 간과하면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 이주자 역량 개발의 필요성
3. 수용국 사람들은 이주자 유입이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내국인의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

<제안>

1. 통합적 교육: 내국인과 이주자 쌍방향 및 공동 교육
2. 상호 이해증진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의 다양화

II. ‘포용’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이주자 및 이주배경 자녀 교육(2008~현재)

- 이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0단계~5단계)
- 이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 다문화가족자녀의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II. '포용'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2008~현재)

<주요 관련 부처별 정책>

1. 법무부: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제고
4. 교육부: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공교육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대민서비스 제공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부처간 다문화이해교육 협업 체계 강화, 공무원 교육 강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 및 교육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등(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II. '포용'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사례: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2008년 법무부가 '다문화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거점대학사업(ABT, Active Brain Tower)'실시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시급,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강사인력 확보 시급, 이민정책 연구 및 교육 기반 시급

- 2009~2019년 현재(9월기준), 전국 47개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운영

- 2019년 9월 기준, 동 과정 졸업생(학부, 석사, 박사) 약 3,500여명

- 다양한 전공 배경의 교육: 한국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국제(개발)학 등

II. '포용'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사례: 공무원 교육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5-3-1-1. 공무원 교육강화(법무부, 행안부)

- 국가,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전문 교육 개설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이해과정 교육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운영의 다양화
- 신규자 및 승진 과정에 다문화관련 교육시간 편성, 매년말 사이버 교육과정 업데이트 여부 등 교과과정 점검

→ 현 단계 공무원 교육 현황진단: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많음. 교육과정 구분에 “전문” 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음. 기초 이해교육 수준에 불과함, 단계별 심화, 전문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II. '포용'사회를 위한 국제이주 관련 교육

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사례: 미디어의 활용



(KBS)2005.11~2015.2



(EBS)2013.10~



(KBS)(8.2%)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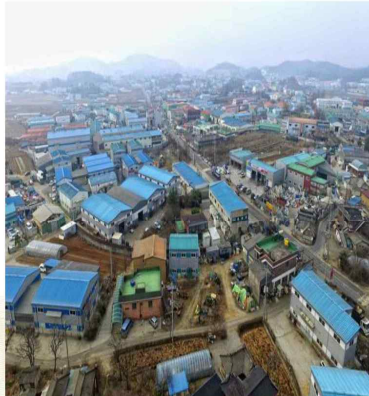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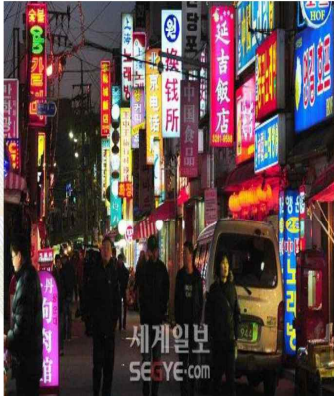
(EBS)2015.9~2019.7



(MBC)(2.9%)20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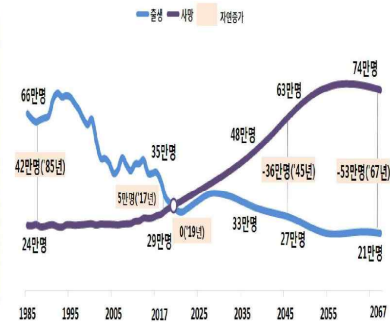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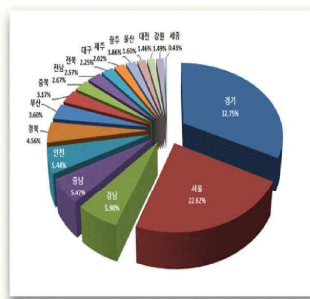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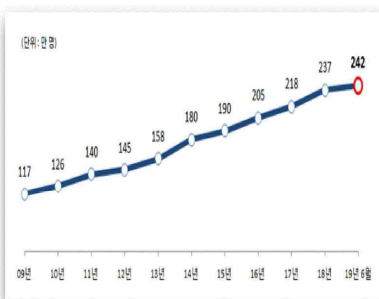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외국인주민의 인구와 밀집지역(도시)



★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2018.12 기준) ★
4.6% (2,367,607 명)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구분	인구 대비 10% 이상	인구 대비 5% 이상	인구 대비 3% 이상	인구 대비 3% 미만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7)(10)	안산시, 영등포구(13.9) 구로구,시흥시, 금천구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부천시 천안시	
외국인주민수 2만명 이상(12)	(금천구)(12.0)	관악구,(평택시) 김포시,아산시,광진구, 김해시 동대문구	성남시 (천안시) (김해시) 인천부평구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정주시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36)	포천시 음성군(12.0)	(동대문구),경기광주시,용산구 안산시,(거제시),경주시 오산시,울주군 양주시,종로구,서울중구	(인천부평구),인천서구,인천남동구 동작구,파주시,광주광산구,제주시, 성북구 서대문구,마포구,인천남구,성동구 연수구,군포시,경산시,광명시, 거제시 이천시(신규)	(청주시),안양시 송파구,대구달서구 서울강서구,남양주시,전주시,
외국인주민수 1만명 미만(10)	(영양군)(11.4) 진천군	고령군,함안군,부산강서구 진도군,성주군,창녕군 고성군,당진시, 영양군		

* 출처: 행안부, 지방자치발전실,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8.11)-지역별호는 2017년 통계
외국인주민 5만명 이상인 지역: 안산, 수원,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 시흥시(행안부 2019.4 기준)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이주자밀집지역(도시)의 상호 학습: 해외 사례(이주민의 정책과 통합측정)

〈표 4-3〉 유럽연합이민자통합지표(Zaragoza지표)

정책영역	Zaragoza 선언(2010)	Pilot study (2011) ¹⁾	추가제안 (2013) ²⁾
고용 (employment)	고용율, 실업률, 활동률 (activity rate)	자영업, 과잉자격 (over-qualification)	공공부문 고용, 임시직 고용, 파트타임고용, 장기간 실업, 해외학위인정율, 유학생유치
교육 (education)	최종 교육수준, 15세 중 읽기·수학·과학에서 저성취자 비율, 30~34세 대졸 비율, 교육과 훈련 조기탈락자 비율	언어능력	유아교육과 보육, 평생교육 참여, 교육·고용·훈련미참여자 Resilient Student, 자력학평가 학교 집중도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중위순소득, 빈곤위험율, 양호/나쁜 건강상태인지를, 재산소유자비율		아동빈곤, 의료보호미충족, 기대수명, 건강행위, 주택비용부담, 주거과밀, 근로빈곤, 만성빈곤
적극적 시민권 (active citizenship)	국적취득율, 장기체류허가소지율, 선출직중 이민자비율	voter turnout	자발적 조직참여, 노조가입, 정당당원, 정치활동

주: 1) Eurostat(2011).

2) Huddleston, Nessen and Tjaden(2013).

〈표 4-4〉 OECD 이민자통합지표

정책영역	주요 지표
1.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가구소득, 빈곤율, 아동빈곤율
2. 주택 (Housing)	주택소유율, 무상/경부지원임대 주거상태(과밀가주/열악한경도), 주거비과부담율
3.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Health status and access to health care)	건강상태인지,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
4. 이민자의 국내출생자녀의 교육수준	프리스쿨교육, 15세 읽기능력, 교육수준
5. 노동시장성과(Labour market outcomes)	고용율, 이민자자녀의 고용율, 실업율, 이민자자녀의 실업률과 NEET율 ²⁾
6. 직업특성(Job characteristics)	임시직, 이민자자녀의 임시직, 파트타임, 기술수준(skill level),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 이민자자녀의 과잉자격, 자영업, 이민자자녀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취업
7.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국적취득율, 선거투표율
8. 차별 (Discrimination)	차별받는기간소속감, 차별경험율
배경지표(Contextual indicators)	이민자규모, 이민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체류기간, 이주동기, 출신지역, 출신국언어: 이민자자녀의 규모, 성, 연령, 부모출신국, 부모교육수준: 이민자가구의 규모와 구성(난독가구 등), 자녀유무, 대도시거주

주: 1) 이민자자녀-양부모가 모두 해외출생인 이민자의 국내출생 15~34세 자녀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s).

2) NEET율(rate) 은 일하지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persons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들의 비율.

자료: OECD(2012b).

표 출처: 이규용 외. 2014.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관계. 한국노동연구원.

III. '포용' 사회를 위한 이주자밀집지역(도시)과 교육

이주자밀집지역(도시)의 상호 학습: 국내 지자체 사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지방자치법 152조 근거로 설립(2012.11.7)

-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직(설립당시 24개 회원)
- 서울 7개(구로, 중로, 성동, 금천(2018), 서대문, 강서, 영등포(2017)), 경기도 14개(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김포, 화성, 광주, 포천), 충남 2개(천안, 아산), 광주 1개(광산), 경남 1개(김해), 인천 1개(남동)

○ 주요기능

- 국내·외 다문화사업 벤치마킹, 회원도시 간 사업 공유 및 업무협력
-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 소관부처 권의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다문화 관련법 제(개)정안 발굴 및 권의
- 협회비 지원사업(회원도시 공모사업) 추진
- 연 2~3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사업별 10,000천원)

(유럽, 북미)해인 벤치마킹 사례

■ Integrating Cities (2010년 ~)

- 유럽 33개 도시이주민통합정책 협력망
· 호피스 네트워크
- Eurocities: 도시 관점이 국가정책, 유럽연합정책 반영 노력 "Integrating Cities Charter" 채택
- 매년 Integrating Cities 회의 개최
 - 좋은 정책(사업) 사례 공유 및 상호방문 및 교류 통해 정책 학습
 - 제원: 유럽통합기금 & 시정부
 - 정책실무자, 전문가, 시공무원, NGO 등 참여
 -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 Fund 신청
 - 정책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toolkits" 개발 공유

IV. <2019 GEMR> 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

1. (강제)이주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중도입국자녀, 난민자녀 등
2. 성인 이주자 대상 교육 내용의 다변화
 - 언어교육 이상의 문화교육, 금융교육 등
3. 난민의 이주자 사회통합교육에 포함
 -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4.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심화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이주와 난민에 관한 내용 포함 등
5. 비형식 교육의 중요성 인식
 - 정부 외, 민간단체의 비형식 교육의 중요성 인정과 지원, 미디어 콘텐츠와 관점 등
6. 이주자의 개발잠재력 활용 확대
 - 숙련기술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심화 등
7. 내국인의 이민(자)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증폭 및 시각지대 해소
 - 부처간 교육 과제의 연계와 통합 등

종합토론

한국사회의 포용성 확장을 위한 방향과 제언

좌장: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패널: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

오유정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윤경호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전예니 서대문구 평생교육팀장



디지털 포용과 지역혁신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부에서 2015년 발간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1]에서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저출산·고령화사회, 고용 불안과 함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산업구조의 양극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다문화 확산과 같은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 국제기구도 물론 각국에서는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포용지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용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성장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의 포용적 개발지수(IDI)[2]에서 한국은 103 개국 가운데 중상위 수준인 16위로 나타났다. 취약한 항목은 낮은 노동 생산성과 국민소득의 중위값, 그리고 국민소득 중위값의 절반 미만인 인구가 14%에 달하는 빈곤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국가의 경제성장을 단순한 GDP가 아닌 제조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자연 자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UN 포용적 부유지수(IWI)[3]에서 한국은 1992-2014 동안 33.0% 개선되어 140 개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으로 2018년 9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4]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 기업, 사회제도의 혁신을 이루며, 재분배 강화, 격차 완화, 계층 이동 증대를 통한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포용정책이 상호 보완하는 포용국가비전은 3대 비전과 9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육부가 2001년에 시작하여 현재 170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한 평생학습도시 사업[5]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함께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들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제는 보다 큰 그림에서 포용국가비전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이다.

특히 2018년 10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마다 새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6]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서,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시·도 국가균형발전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 평가·개선,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모니터링은 물론 과제발굴 연구, 지역-중앙, 광역-기초 간 협력활동 및 지역혁신 정책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하여 디지털 포용을 활용한 전 방위적 지역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미래이슈분석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5.07.
- [2] The Inclusive Development Index, WEF, 2018
- [3] Inclusive Wealth Report, UN, 2018
- [4]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2018.09.11.
- [5] 사회혁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주민자치, 자치분권위원회, 2019.02.08.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2019.07.09 시행

포용성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오유정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UN 제61차 총회에서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3조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을, 제24조는 ‘장애인의 차별 없고 동등한 교육에의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바탕으로 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SDG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누구도 평생학습과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 받을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의 향유와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이 된다. 장애인이 교육권에 접근하지 못하면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권은 다른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밑거름이다(원재천 외, 2016).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였는데 박승희(2004)는 “장애인 교육분야에서는 학령기 장애학생에게 학교교육(고등학교까지)을 제공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온 실정인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2000년대에 이르러 최근까지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pp.44-45)”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져 갔고,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근거와 역할이 규정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장애인이 성인기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었음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년~’22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양질의 교육 보장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는 201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성인학습과 교육에 관한 수정 권고안의 3가지 핵심영역-문해력과 기초기술 습득, 계속교육 및 전문성 개발, 적극적인 시민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점차 강화되면, 전 생애에 걸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으로 개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참고문헌

교육부 (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종: 저자

박승희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원재천, 전명희, 김미연, 이수효, 이시연, 정숙희, 최용준, 황충만 역 (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HUMAN RIGHTS. YES!*, Katherine N. Guernsey, Joelle M. Balfe, Valerie L. Karr, and Allison S. deFranco, Nanacy Flowers,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경기: 공동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배제적인 교육 거버넌스의 개선과 국가교육비전으로써 시민사회 교육 활성화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포용성 달성을 위한 기본전제

- 교육의 목적 :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시민 주체’ 양성
- 의사결정 과정 내 ‘의사결정 구성원’의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 투명성, 대표성 확보

2. 포용성을 위한 교육: 배제적인 교육 거버넌스 개편 필요

1) 구성원의 포용성 부족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현황
 - 남성, 학계 중심
 - 장애인 및 교육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관계자 부재
- 국가교육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3개 위원회만 구성·운영되어, 장애등록인구만 전체 인구의 5%(20명 중 1명)를 차지하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구조적으로 부재한 상황.
-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의 성별/장애/교육이해주체별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필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촉직 위원의 “포용성” 현황〉

구분	성별		장애여부	
	남	여	장애	비장애
인원(명)	8	4	0	12
비율(%)	67	33	0	100

구분	이해주체별					
	학계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인원(명)	7	2	3	0	0	0
비율(%)	58	17	25	0	0	0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위원명단 참조. 2019-10-28 방문

2) 의사결정구조의 개방성, 투명성, 대표성 부족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대통령령)’에 따르면,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만을 명시해,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님.

- 보다 광범위한 교육권리주체들의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방적, 투명한 참여 공간이 부재하여, 교육정책의 통합성 및 포용성 구현이 구조적으로 제한.
-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목표 및 지표 설정과 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보고를 시행하고, 이를 참여 속의·공론화 장을 통해 공표할 필요.

3. 지속가능발전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역동적·실천적 교육의 시작: 국가교육 정책 일환으로 비제도권 시민사회 교육 포괄 필요

- 교육부의 교육정책 대상 : 현재 유아·초·중·고 학교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공식교육’ 부분만 포괄.
- 시민사회단체들의 교육강연, 현장체험교육활동, 포럼/워크숍/정책토론회 등 회의과정, 캠페인 조직·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활동 등은 교육정책 대상에서 배제.
- 예를 들어, 11개 이슈분야의 31개 단체들로 결성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의 매년 발간과 정기적인 ‘역량강화 세미나’ 과정을 통해 11개 이슈분야 시민사회단체들간 상호 이슈에 대한 학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강화.
- 특히, 그동안 장애관점 인식이 낮았던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장애관점 인식이 괄목할만하게 확대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 연계를 모색.
- 그러나 교육부의 비공식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부재로, 광범위하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국가교육 비전과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민주체” 양성을 위한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인식 부족에서 비롯.
- 인권, 민주, 평화, 환경, 지속가능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분야와 “활동과정”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기 위해서 ‘비공식 교육’에 대한 국가교육정책 수립이 필요.
- 이를 위하여, ‘비공식 교육’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전예니 (서대문구 평생교육팀장)

학습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

2012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고문에는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성장’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지속’, ‘가능’, ‘발전’의 단어 하나는 익숙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 ‘파이팅’을 외치는 우리는 ‘지속발전가능’이 익숙하다. ‘지속발전’을 외치던 우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경쟁 심화,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행복지수 최하위 등 새로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 그럼 ‘지속’이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역단위에서, 학습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의미인가?

포용적이고 공평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 보고된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환경,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등에만 필요한 가치가 아닌 교육, 시민성, 사회 성숙도 등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를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 교육 영역에서 포함에서 다루고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학습도시의 포용

우리나라의 학습도시의 포용성은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을까? 서울연구원에서는 「포용도시를 향하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²¹⁾ 정책리포트에서 도시의 문제를 포용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했다.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 사람, 공간, 거버넌스 포용성 등 3개 부문 34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된 지표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도시 단위에서 포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습도시 관점에서 포용 지표를 개발한다면 학습기회, 학습으로의 접근성, 소외대상에 대한 학습지원, 시민성관련 사업 지원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학습도시의 소외

소득수준, 학력, 신체적 장애, 사회적 고립, 긴 노동시간 등의 요인으로 학습으로의 소외가

21) 변미리(2018).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진단. 서울: 서울연구원.

있을 수 있다. 이런 학습으로의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국가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지역단위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 학습도시는 169개,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44개 도시이다.(전세계 52개국 224개 도시)

학습도시들은 다양한 사업으로 학습의 수준, 영역, 방법, 도구를 다양화하여 학습에서의 소외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비해 규모나 예산이 턱없이 적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예산을 들여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있다.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로 311만명의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도시들은 이런 비문해 성인들을 위해 과정을 운영하고 문해교육에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사회적 고립문제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방법을 찾기도 한다. 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긴 노동시간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일만하는 시민이 아닌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의 평생학습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2014년부터는 읍·면·동 단위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서울지역의 예를 들면 ‘동네배움터’ 사업을 통해 25개구 약 424개 동 전체에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인식확산이 필요하지만 방향이나 발전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

학습도시 메데진

배움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예를 소개하고 싶다. 지난 10월 1일~3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는 제4차 유네스코 평생학습 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네스코는 ‘포용’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마지막 날 메데진 시장이 직접 해설하는 메데진시 탐방이 진행되었다. 탐방했던 시에라(al sierra, medelin) 지역을 소개하고 싶다. 콜롬비아의 메데진은 ‘메데진 카르텔’, 1970~80년대 중남미의 유명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범죄 조직과 총, 마약, 갱단으로 유명하다. 갱단이 활동했던 메데진의 산비탈에는 파벨라(빈민가)가 있다. 높은 산의 빈민가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가기도, 배우러 학교에 가기도 쉽지 않다. 메데진시는 2004부터 연결한 케이블카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 경찰을 배치하고 이용요금도 740원정도로 저렴하며 3시간쯤 걸렸던 학교 가는 시간, 일하러 가는 시간, 배우러 가는 시간을 15분으로 줄였다. 점차 작은 상점들이 생겨났고 관광객들이 찾아 왔다.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줄루아가 메데진 시장은 이곳이 진짜 메데진이라며 설명을 했다. ‘포용성’이라는 컨퍼런스 주제와 딱 맞는 주최도시였고 우리나라의 학습도시의 접근성은 어떤지, 학습 소외 대상이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포용의 시작, 평생학습과 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 목표 4.7의 이행 및 국제협력의 이해를 위해 시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다.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과 세계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평화교육, 인권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대화를 통한 타자이해, 상호 의존성과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인식 등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다.

학습도시에서는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시민성 관련 사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평생학습에 비해 정책, 교육과정 개발, 해당 분야 강사 및 활동가 교육, 참여 주민 수 등 여러 측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 사업을 기획하기도, 교수자를 찾기도, 비전을 논의해서 체계화하기도 어렵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추구 할수록 시민성과 관련한 사업들은 더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을 중요 가치로 두는 사회, 성숙한 사회로 가는 시작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V. 부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4.3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4.4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세부목표 4.5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4.6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7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4.a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4.b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세부목표 4.c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펴낸날 2019년 11월 5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전화 02-6958-4124
전자우편 ed.team@unesco.or.kr

간행물등록번호 ED-2019-DI-10

WE SUPPORT SDG 4 QUALITY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